'미국 우선주의' 안보·통상 대변화 예고…세계는 '초긴장'

트럼프, 경제·통상·이민·대외정책 등 100여개 '행정명령' 전망 캐나다·중국 등 고율 관세 여부·우크라 전쟁 대응 방식도 관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초대형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역사적인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 트럼프 2.0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다.

동맹국을 포함해 사실상 피아를 구분 않는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 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 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다.

특히 신(新)식민주의, '돈로(Donro·트럼프의 도널드와 몬로 전 대통령의 합성어) 독트린'등으로까지 불리는 취임 전 영토 확장 공세에서 보듯이미국 유권자의 재신임을 받은 트럼프 2기 정부는단순히 1기의 연장이 아니라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정부'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초긴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 이란 등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면서 밀착 행보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 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된 전후국제 질서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낮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을 한다.

그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취임사를 하고 향후 4년간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낮 12 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시작된다.

그는 취임식을 마치고 의회 오찬과 군 사열 행사 등을 한 뒤 백악관에 입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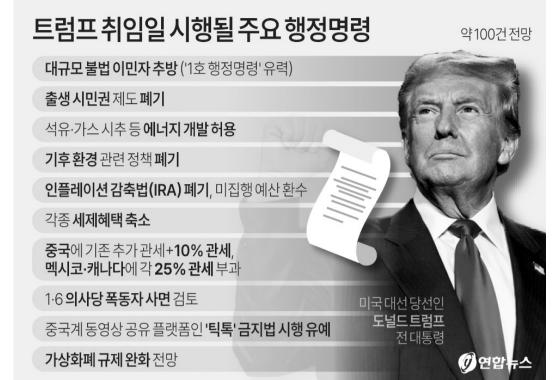
대선 때 사실상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정책 등에 대한 100여개의 '무더기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시행 여부다.

나아가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 에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대규모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법적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무역법이 아니라 국제경제비상권 한법(IEEPA)에 따라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속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캐나다, 멕시코 등은 트럼 프 당선인이 실제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글로벌 통 상 전쟁의 서막을 열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16일 미국의 10%의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통상전쟁이 현실이 될 경우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 률이 2.7%에서 2.4%로 0.3% 포인트나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이 불안하게 개시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도 국제적 관심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트 럼프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속히 회동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간 회동을 위한 물밑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먼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과 관련, 트럼프 당선인 측 에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전부 수복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포기 등이 포함된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 제를 포함한 종전의 방향은 향후 유럽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동맹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료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응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잡하게 하

는 요인으로 '북한의 참전'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트럼프 2 기 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 고, 조기에 북미간 대화나 정상간 외교로 발전할 수 도 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의 개인적 친분을 수차 강조해왔으며 특히 "핵무 기를 가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 이 좋다"는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 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기 도 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해법이 주목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부자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압박할 것으로 제막되다.

'데이 원' 공약은 아니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뒤 파나마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및 캐나다 미국 편입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 방법으로 경제적 강압은 물론 무력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실제 현실이 될 경우 엄청난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와 달리 내각도 이른바 '충성파'로만 구성될 전망이며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으로부터도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도 지난해 대통령에 광 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상태라 트럼프 2기 정부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독주를 견제할 브레이 크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못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패키지 의 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 다. /연합뉴스

다보스포럼 개막…트럼프 변수 속 분쟁·기후해법 모색

각국 리더 2500명 참여…한국,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 불참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20일(현자시간)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다.

1971년 출범한 다보스포럼은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州)에 있는 다보스에 매년 1월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다.

다보스포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로 55회째인 이 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삶의 변화를 초 래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면서도 부작 용을 예방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 보자는 취지다.

하위 의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인적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이 잡혀 있다.

세계 각국에서 350명가량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 900명 이상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학계 및 비정

부기구(NFO) 관계자 등 총 2500여명이 참석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 원장, 당쉐샹 중국 부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 통령 등 정상급 인사 50여명이 포함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각 기구의 수장이 자리를 함께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들도 자리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장관급 이상의 고위 인사가 참 석하지 않는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회의 의제를 바꿔왔지만 지정 학적 갈등의 해소,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무역의 복원, 글로벌 격차 해소 등 글로벌 공통 현안을 놓 고 협력하자는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의 집권은 이런 현안들과 떼어놓을 수 없는 변수다. 온라인 방식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사흘 뒤인 23일 오후 다보스포럼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활성화 등 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미국 행정부 교체와 맞물리지 않은 게 없을 정도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그의 온라인 연설에 세계적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내달 3주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 발효로 새 국면에 접어든 중동 전쟁 해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헤르조그 대통령, 모하마드 자 바드 자리프 이란 전략담당 부통령 등 행사에 참석 할 분쟁 당사국의 면면은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내 정치인 ·단체장 중 유일하게 다보스포럼에 나선다. 김 지사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66

이스라엘-하마스 '불안한 휴전' 유지될까

복잡한 휴전 3단계…단계마다 새로운 협상 필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가자지구 전쟁이 15개월 만에 중단됐지만, 휴전 이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단계로 진행되는 복잡한 휴전 단계 를 잠재적 위기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단계마다 새로운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호

신뢰가 부족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라는 것이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단계로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이스라엘 군 인 석방과 영구 휴전 등 2·3단계 휴전 논의를 시 작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러한 합 의 내용을 지킬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 고 있다. 실제 이날 휴전 발효 시점도 하마스 탓 에 당초 양측의 합의보다 2시간 45분가량 늦춰졌 다. 하마스가 석방 24시간 전 석방할 인질 명단 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날 오전 에서야 뒤늦게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반면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깨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를 벌일 당시 납치한 이스라 엘의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를 풀어주면 이스라 엘이 다시 하마스의 본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 구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에서는 극우 정당 소속의 일부 장관들이 연정 탈퇴를 시사하는 등 휴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향후 연정 붕괴 등 이스라엘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휴전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테러 직후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약속

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도 국내 여론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요소다.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휴전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